

대한민국 ESG 및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고서

“ESG,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공동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
Impact for Breakfast Seoul Working Group

2022년 4월



요약

본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었다. 한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는 동시에 견고한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경제 성장 전망을 안고 2022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규모가 큰 일부 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내수기업,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가 적은 청년층, 중소기업, 이주민,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다수가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기 오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기후변화 목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ESG는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ESG가 제시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그린 워싱’(Green Washing: 실질적인 사회·환경 변화보다는 친환경 이미지를 각색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ESG를 활용하는 행위)과 규제의 모호성이라는 두 가지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ESG¹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ESG에 투입된 금액은 2020년 약 2~3억 달러에서 2022년 초에는 약 70억 달러로 증가했다(출처: 신한자산운용).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PR부터 리스크와 비용 최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ESG 가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SG에서 S(사회) 혹은 G(거버넌스)보다는 E(환경)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들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CSR(기업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비 ESG 검색 건수가 3배 높아질 만큼 ESG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졌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개발, 사회 및 환경 활동을 위한 민간투자가 급격하게 활성화되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동인 중 하나는 주요 소비 및 자본 소유층의 세대 교체로, 실제로 2030년까지 68조 달러의 부가 자산 상속을 통해 베이비 붐 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30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투자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유럽과 북미를 필두로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ESG 투자 혹은 유사한 투자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책임투자 활동(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은 경제와 기업 성장에 일조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예: 환경 비친화적 기업 투자 제한), ‘테마 투자’(예: 기후 관련 투자 혹은 여성, 소수민족, 난민 등 특정 인구집단을 지원하는 투자 모델),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을 통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예: 개발도상국 내 가난한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핀테크 솔루션) 등 책임투자 유형은 다양하다. 이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잘 정착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¹ ESG(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평가기준은 사회적 책임 의식이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선별할 때 기업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을 제시한다.

한국 정부는 급변하는 ESG 트렌드를 뒤늦게 따라가기 시작했다. ESG 관련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니즈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민간부문, 학계, 정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차기 행정부를 위한 ESG 관련 주요 우선순위와 함께 본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ESG와 책임투자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내 사회·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었다. ESG는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 및 국내 정책의 시장 왜곡 방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모호성, 특히 정보 공시 및 측정 기준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가장 큰 도전과제이다. 한 정책 실무 그룹 구성원 중 한 명은 “ESG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사람들이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지만, ESG 때문에 기업 대표들은 밤 잠을 설친다”고 언급했다. 컴플라이언스, 기준 미달, 상충되는 신호, 과도한 요구조건 등으로 인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한테는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한국의 정책입안자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ESG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시장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ESG 관련 공공정책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는 세제혜택이나 ESG 관련 투자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등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금융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지만,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2018년 OECD 연구는 좋은 참고자료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진행된 조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사업은 실제로 수혜 기업의 생산성을 낮추고 경쟁력 낮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책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ESG 우선순위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1.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정부의 ESG 전략 및 계획 수립.
이러한 전략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Control Tower)’ 구성 권고.
2.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금융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점검 실시.
3. 중소기업 지원 등 ESG 투자 관련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와 정부의 전략 계획 간의 일관성 강화.
4.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Taxonomy) 구축 주도.
5. 컴플라이언스 및 공시 기준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수립.
6.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의 유동성 확보와 투자 회수 촉진.
7. ESG에 대한 인식 제고: 지속가능금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목 차

	▼ 요약	2
	▼ 감사의 말	5
	▼ 약어 설명	6
I	▼ 서론 : 맥락 및 배경설명	8
II	▼ 개요 : 도전과 기회	11
	글로벌 트렌드	11
	2021~2022년 국내 현황	11
	주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	13
III	▼ 방법론	14
IV	▼ ESG와 지속가능금융 관련 주요 국내 테마	15
	1. 정보 공시 및 평가	15
	2. 시장 친화적 접근 방식을 통한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활성화	18
V	▼ 정책권고	22
	Annex 1 : 한국형 ESG	30
	Annex 2 : 임팩트 가중 회계	32
	Annex 3 : 일본 ESG 사례연구	34
	▼ 참조 문헌	36

감사의 말

본 보고서는 견고한 ESG 생태계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IFB (Impact for Breakfast) 실무 정책 그룹은 최근 국내에서 커진 ESG에 대한 관심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와 실질적인 도전과제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임팩트 투자 선구자인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정진호 회장과 조정훈 국회의원 (시대전환)이 본 보고서와 IFB 실무 정책 그룹의 공동의장을 맡아주었습니다.

아시아재단과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IFB 서울 실무 정책 그룹의 사무국을 맡아 연구와 활동을 주도하였으며, 더웰스인베스트먼트는 회의 장소와 본 보고서 작성 및 발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실무 정책 그룹은 황이석 교수(서울대학교), 조정훈 국회의원, 정진호 회장 (더웰스인베스트먼트), 강신일 부대표 (MYSC), 곽태선 변호사 (에스앤엘파트너스), 김형진 매니징 디렉터 (클로버파트너스), 김정태 대표 (MYSC), 로버트 김 매니징 디렉터 (캡록 캐피탈), 김광욱 대표(아시아재단 한국 지부), 박종학 대표(베어링 자산운용 한국법인), 크리스 라시티 대표 (ANZ 코리아), 손지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외 샤이나 탄 매니저를 비롯한 ANZ에서 의견을 제공했고, 최만연 대표(블랙록 한국법인), 김용목 대표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를 포함한 IFB 서울 회원들이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IFB 실무 정책 그룹의 지침과 의견을 기반으로 아시아재단 김광욱 대표와 이재명 사원이 작성하였으며, 김지혜 인턴이 작성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약어 설명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UM	Assets Under Management (운용자산 규모)
BOK	Bank of Korea (한국은행)
CFE	Center for Free Enterprise (자유기업원)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사회적책임)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전자공시시스템)
ECB	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 (유럽 단일접속지점)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EXIM	Import-Export Bank of Korea (EXIM 혹은 KEXIM, 한국수출입은행)
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OMEK	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of Kore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FKI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전국경제인연합회)
FS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금융위원회)
GP	General Partner (무한책임사원)
HKEX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홍콩증권거래소)

IFB	Impact for Breakfast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KCCI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한국상공회의소)
KDB	Korea Development Bank (한국산업은행)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IS	Korea Investors Service (한국신용평가)
KOSPI	Korean Composite Stock Price Index (한국종합주가지수)
K-ESG Index	Korea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dex (한국형 ESG 지표)
KRX	Korea Exchange (한국거래소)
LP	Limited Partners (유한책임사원)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
M&A	Mergers & Acquisitions (인수합병)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비정부기구)
NPS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공단)
PE	Private Equity (사모펀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IB	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USD	United States Dollar (미국 달러)
VC	Venture Capital (벤처캐피탈)

I. 서론 : 맥락 및 배경설명

본 정책 보고서는 2020년 9월에 출범한 IFB (Impact for Breakfast) 서울 네트워크에 속한투자자, 시민사회, 정부 관계자 등이 지속적인 논의에 대한 결과물이다. 2021년, IFB 실무그룹은 6개월 간 주요 ESG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한 정부 정책권고안을 도출했다. 본 실무 그룹은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과 임팩트 벤처 투자사인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의 정진호 회장이 의장을 맡았으며, 아시아재단과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IFB 서울 실무 정책 그룹의 사무국을 맡았다.

전반적인 맥락을 설정하기 위해 2020년 9월에 첫 개최된 IFB 서울 회의에서는 한국에서 지속가능금융²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잠정적 우선순위를 정했다.

- 한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금융 주류화
- 한국 사회를 넘어 아시아 전역 내 불평등 해소 및 포용성 확대
- 한국과 아시아 지역 간 글로벌 및 지역 연계성 강화

참고로, IFB 서울 실무 정책 그룹 논의에는 두 개의 아시아재단 연구 보고서를 참고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진행된 '한국 지속가능금융 연구조사', 한양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한국 스타트업 및 사회혁신 생태계 연구조사').

IFB 회의와 아시아재단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요 도전과제 및 테마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실무 정책 그룹 논의에 적절히 반영되었다:

- (IFB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주류 투자자와 임팩트 투자자 간 네트워크 강화
-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내 공적자금의 역할 점검
- 대체자산(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국내외 관점 비교
- ESG 연구, 보고, 공시, 임팩트 및 평가 관련 정보 및 데이터 부족
- 지속가능금융 관련 '그린워싱' 문제(임팩트 보다는 마케팅 중심의 지속가능금융 활동)

² '지속가능금융'이란 사회·환경과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사항을 모두 고려하는 투자 접근법을 뜻한다. 여기에는 공모주식,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채권과 같은 채무증서 등 다양한 자산군과 투자기구가 포함된다. ESG는 보다 포괄적인 지속가능금융 투자 접근 방식의 일부이다. 기후변화, 젠더 문제 등과 관련된 테마 투자, 임팩트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도 지속가능금융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다양한 한국 사회 구성원을 포괄하는 IFB 실무 정책 그룹은, 공익을 위한 한국에서의 지속가능금융 주류화와 관련된 도전과제와 기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운영되었다. 본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했다.

- 지속가능금융을 통한 한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불평등 해소 및 포용성 확대
-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강화 (예: ESG와 임팩트 투자)

IFB 서울 소개

Impact for Breakfast (IFB)는 16개 도시를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20,000명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IFB 서울은 투자자와 임팩트 투자자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내 지속가능금융 생태계를 강화하는 설립 목적을 갖고 2020년 9월에 출범했다. IFB 서울 활동은 설립 멤버인 MYSC와 더웰스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아시아재단 한국지부가 운영하고 있다.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소개

더웰스인베스트먼트는 2천억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전문회사이며, 한국에서 사회·환경 책임 투자에 주목하는 선구적인 노력을 해왔다. 헬스케어, 첨단기술, 소비재 등 산업에 투자하는 더웰스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는 65개가 넘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훈 국회의원 소개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으로 시대전환을 창단했다. 정계에 진출하기 전 조정훈 국회의원은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를 역임했으며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초빙 교수로도 활동했다.

아시아재단 소개

아시아재단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개발협력 기관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아시아재단은 아시아 18개국과 워싱턴 DC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5년 동안 아시아재단은 한국과 함께하며 아시아에서 한국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MYSC 소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사회양극화, 경제불평등, 기후위기 등 세계 3대 난제의 해결에 컨설팅, 액셀러레이팅, 임팩트투자를 통해 기여하는 영리기업이다. 국내 최대 규모급 액셀러레이터로서 운용자산은 420억 원이며, 현재까지 약 80개의 스타트업과 소셜벤처에 투자했다.

실무 정책 그룹 구성원

IFB 실무 정책 그룹은 민간부문, 정부, 학계, 시민사회, 비정부기관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인원들로 구성되었다.

핵심 구성원

- 조정훈 국회의원
- 정진호 회장 (더웰스인베스트먼트)
- 강신일 부대표 (MYSC)
- 곽태선 변호사 (에스앤엘파트너스)
- 김형진 매니징 디렉터 (클로버파트너스)
- 김정태 대표 (MYSC)
- 김광욱 대표 (아시아재단)
- 박종학 대표 (베어링자산운용 한국법인)
- 손지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기타 IFB 실무 정책 그룹 참여자

- 황이석 교수 (서울대학교)
- 로버트 킴 매니징 디렉터 (캡록캐피탈)
- 크리스 라시티 대표 (ANZ 코리아)

초청 연사

- 카말라 KC (에스앤엘파트너스) — 일본 ESG 사례연구
- 김동수 소장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형 ESG 모델
- 문철우 교수 (성균관대학교) — 임팩트 가중 회계

II. 개요 : 도전과 기회

글로벌 트렌드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 간 개발, 사회 및 환경 활동에 상당한 민간 자본이 투입되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5조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 트렌드와 자본 배분을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게 되는 경제 주역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기업들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친화적,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해 높아진 요구에 대응해왔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30년까지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 붐 세대로부터 총 68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출처: FORBES). 그 결과 “책임투자” 혹은 사회, 환경 등 비재무적 요인이 반영된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며,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사(패밀리 오피스, 기관투자자 포함)도 이에 대응하고 있다.

2021~2022년 국내 현황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한국과 동아시아 투자자들의 총 자산 대비 사회책임투자 비중은 유럽과 호주의 50%, 캐나다의 38%와 비교했을 때 1% 미만을 차지하면서 크게 뒤쳐진 모습이다(출처: 글로벌 지속가능투자연합, GSIA).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21년 2~3억 달러 규모였던 한국의 사회책임투자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70억 달러로 성장했고(출처: 신한자산운용) 지금도 꾸준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2021년에는 ESG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아시아재단의 Google Trend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ESG’의 온라인 검색 건수가 2021년에 정점을 찍으면서 전통적인 지속가능성 개념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사회적책임) 검색 건수의 3배,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검색 건수의 6배를 기록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한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동시에 견고한 반도체 수출 등에 힘입은 경제 성장세의 전망을 안고 2022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규모가 큰 일부 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내수기업,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가 적은 청년층, 중소기업, 이주민,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다수가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기 오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기후변화 목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과 함께 비용 효과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은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지수에서 13위를 차지했다(2019년 최신 보고서 기준). 한국은 공공 재정, 기술 혁신,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 산업 발전이 더디고 사회적 담화 수준은 여전히 피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 세계적으로 책임투자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은 ESG와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생태계를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 유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SG와 관련하여 비용 효과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한국은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속하지만, 유럽연합과 달리 아직까지 제조산업 의존도가 높아 유럽과 동일한 탄소중립 기준을 도입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³. 제조업 중심의 성장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ESG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 ESG는 단순한 네거티브 스크리닝과 비친환경적 자산 매각을 넘어 다양한 투자 전략을 포괄한다. ESG는 산업계, 사회단체, 비정부기구,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사회적 기회와 실질적인 환경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ESG 시장 규모가 한국에서만 수천억 달러에 달하고 국내외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ESG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높기 때문에 ESG는 국가의 경제, 기업, 사회 및 환경 생태계를 도약시킬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보장된 것은 없다. 우선 ‘그린워싱’(Green Washing: 실질적인 사회·환경 변화보다는 친환경 이미지를 각색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ESG를 활용하는 행위)과 규제의 모호성이라는 두 가지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

³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 부문은 GDP의 24.8%를 차지하는 반면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제조업의 GDP 비중은 각각 14.6%, 10.9%에 불과하다.

주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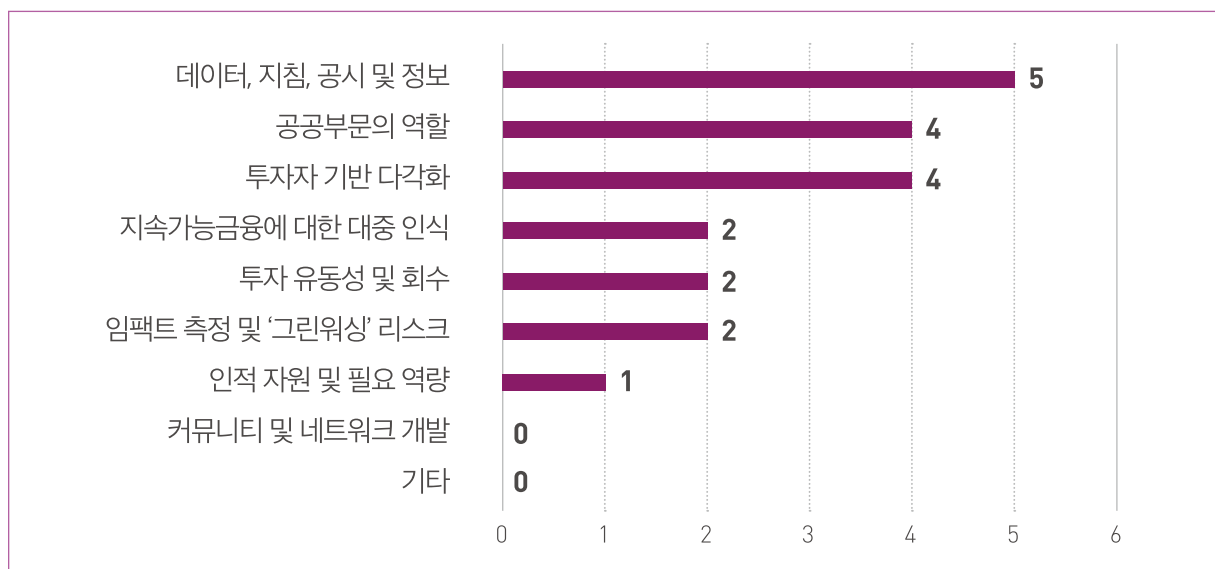
ESG 정책권고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주요 이해관계자와 이들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 결과, “모호한 기준”은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이었다.

이해관계자 구분	주요 관심 분야
공공부문	• 사회적 포용성 증진, 공시 및 보고의 일관성과 무결성 보장 등 공익을 위한 ESG
다국적 기업	• 명확한 규제 조건 • 공급 혹은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인센티브 -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정책 계획이나 민관 협력을 통해 ESG의 중요성을 보여주는(‘신호’)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벤처캐피탈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VC 포함)	• 벤처캐피탈과 ESG 금융 (예: 금융중개시장) 사이 자금조달 격차 해소 • 2026년 이후부터 투자 유동성 확보 • 비효율적인 사회적 금융시장
자산운용사	• 표준화된 데이터 플랫폼의 결여 (통합된 지침 또는 원칙의 필요성) • 비교가능성, 정확성 및 신뢰성이 보장되는 비재무적 지표 측정 및 보고와 관련된 도전과제 (예: DART) • 2030년부터 시행되는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대응 준비
패밀리 오피스 및 자산관리사업 (PWM)	•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신뢰 가능하며, 공동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 및 공동투자자 모색 • 규제의 명확성

III. 방법론

한국에서 지속가능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련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는 실무 정책 그룹이 2021년 5월에 구성되었다. MYSC와 아시아재단이 주최한 회의에서 심층적인 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을 거친 뒤 실무그룹은 다음과 같은 주요 테마를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그림 1] ESG 이슈 우선순위



위 범주는 크게 두 가지의 테마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1. '정보 공시 및 측정'

- a. 데이터, 지침, 공시 및 정보
- b. 임팩트 측정

2. '시장 친화적 접근 방식을 통한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활성화'

- a. 공공부문의 역할
- b. 투자자 기반 다각화
- c.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대중 인식
- d. 투자 유동성 및 회수

실무 정책 그룹은 2021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매달 소집되는 회의 외에도 지속적으로 만나 위와 같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권고 내용을 함께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형 ESG, 임팩트 가중 회계, 일본 사례연구 등에 대한 식견을 공유 해줄 전문가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IV. ESG와 지속가능금융 관련 주요 국내 테마

1. 정보 공시 및 측정

1) 정보 및 공시

1.1 자발적 및 비자발적 ESG 정보 공시 - 자발적 ESG 정보 공시에 의존할지 혹은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 미국이 대표적으로 '자발적' 제도를 추구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ESG 규정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다. 한국만의 맥락, 특성,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범국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1.2 ESG 데이터 부족과 기업 공시 기준의 모호성 - 정책 소요가 가장 크다고 파악되었던 부분이나, 일부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 이슈였다. 이러한 정보격차에 대응하여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ESG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공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3 중앙 지침의 부재 - 5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ESG를 도입하는 데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ESG 범위와 기준의 모호성'이다.

1.4 ESG 공시 비용 부담 (특히 중소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ESG 데이터를 생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비용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전경련은 자체 조사를 통해 ESG 보고서 비용 등 문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ESG 공시 품질 격차를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Box 1 : 국내 ESG 공시 비용 관련 시사점

한국 정부가 ESG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외부 전문가(예: 컨설턴트)에 의존하여 ESG 공시를 하고 있다.

2021년 12월 한국상장기업협의회가 국내 254개 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⁴에 따르면, ESG 공시 관련 서비스에 소요되는 총 평균 비용은 9,300만 원에 육박하며 이 중 50% 이상은 연간 1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한국상장기업협회 보고서와 한국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보고서⁵를 기준으로 ESG 공시 관련 예상 비용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	예상 비용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문 및 대리 서비스	8,660만 원
제3자 인증 서비스	1,500만 원
기타 비용 (예: 법무비용, 관리 비용, 인건비)	1억 9,700만 원
총 예상 비용	2억 9,860만 원
평균 전담 직원 수	5명
연간 평균 근무일수	90일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지만 일부 대기업은 지속가능경영 및 ESG 공시를 위한 전담 부서나 팀을 구성해서 사내 역량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원과 전문성 부족으로 컨설팅 기업이나 자문회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SG와 지속가능경영 전담 부서 혹은 팀의 유무에 대한 한국상장기업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56.4%는 이미 전담 부서나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27.3%는 임시 T/F를 구성했다. 반면 조사 대상 기업(자산규모 5천억 원 미만)의 78.5%는 전담 부서 혹은 팀이나 임시 T/F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⁵ 한국상공회의소,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 분석 결과보고서", 2021년 12월 (전문은 링크 참조)

2) 측정 및 회계

2.1 ESG 측정 및 공시 기준의 일관성 부족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600가지가 넘는 ESG 공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공시 기준이 존재할 경우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져 일관성이 부족해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임팩트투자추진단 (Global Steering Committee for Impact Investment) 한국 국가자문위원회가 공유한 임팩트 가중 회계와 같은 기준들을 참고할 수 있다 (Annex 2 참조).

2.2 한국 정부의 한국형 ESG 지표 - ESG 측정 및 공시를 위한 중앙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국형 ESG 지표를 개발했으며, 현재 200개 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형 ESG 지표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형 ESG 지표 초안은 이산화탄소 배출과 산업 재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본 지표가 기존 세계 표준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ESG 지표에 대한 요약은 Annex 1 참조).

3) 지속가능금융과 ESG에 대한 대중 인식 부족

3.1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 및 대중 인식 향상 - 2021년 4월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기업 CEO의 66%가 ESG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ESG에 관심 보이는 주요 동인은 ESG를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자 압력, ESG 관련 공시의 법적 컴플라이언스, 브랜드 이미지 등 외부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수요 측면과 관련하여 한국상공회의소가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가 기업의 ESG 활동이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ESG 활동이 소비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0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MZ세대) 1천 명의 소비 성향을 설문한 한국경제매거진 조사⁶에서 응답자의 86.2%는 같은 가격이라면 ESG 성과가 좋은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69.6%는 ESG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의 구매 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3.2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 - 2021년 전경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9.7%가 대기업이 ESG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이라고 지적하면서,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19.8%가 ESG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답했으며 ESG 기준을 준수할 '준비'가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8%에 불과했다. 일반 대중의 경우 소비자의 72.7%가 ESG와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자유기업원, 2021년 1월).

⁶ 한국경제매거진, "MZ세대 49.6% "비싸도 친환경 제품"... "명품 1개 이상 있다" 63.5%", 2021년 10월 27일 (링크: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10200135b>)

⁷ 코리아타임즈, "한국 대기업, ESG 통합에 고군분투하다", 2022년 3월 22일.

(링크: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2/03/419_325940.html)

⁸ 상동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조차 ESG에 대한 이해 부족이 기업 활동에 ESG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주요 장애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대기업들이 “ESG가 기존 CSR을 고급스럽게 포장한 개념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의 52%가 ESG 위원회를 신설한 반면,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제 중 ESG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31.3%에 불과⁷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은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해외투자자들이 투자 매력을 느낄만한 기업들의 범위가 국내에서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ESG활동으로 인해 해외 자본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리스크 대비, ESG 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소모가 더욱 크게 인식될 수 있다⁸. 그 결과 ESG 경영에 투자하고 노력하도록 시장 인센티브를 도입해도 한국 대기업은 해외 기업만큼 이를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2. 시장 친화적 접근 방식을 통한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활성화

1) 지속가능금융 생태계를 지탱하는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

1.1. 지속가능금융 시장 내 높은 공적자금 비중. 2021년 기준 정부 보조금, 정부 대출, 정부 채무 보증, 지분투자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투자 채권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39.3조 원에 달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운용하는 870조 원의 자산 중 24%는 ESG 연계 자산에 투자되었고 국민연금은 내년까지 그 비중을 50%까지 높일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하였다.

다른 국가와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채권 시장을 비교했을 때 2021년 기준, 민간부분의 투자금 대비 정부 지원금은 59.4%⁹로 프랑스(32.3%)¹⁰, 일본 (29%)¹¹, 미국(23%)¹², 아세안(27%)¹³ 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나는 모습이다.

1.2.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자금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정책 왜곡 현상 위험.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 내 지속가능금융이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2018년 OECD 연구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사업은 실제로 수혜 기업의 생산성을 낮추고 경쟁력 낮은 기업의 생존을 도우며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공적 자금이 공급됨에 따라, 기업 활동이 아닌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부실 기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에버그리닝: Evergreening’). 이 외에도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들이 민간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적어지고, 기업 규모를 확장시킬

9 2021년 9월 30일 기후변화센터에서 주최한 제2회 지니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녹색 금융 투자의 국내 동향”에 대한 한국신용평가 강연을 통해 공유된 데이터 (링크: <http://www.climatechangecenter.kr/boards/reference/view?&page=1&id=1693>)

10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2018년 프랑스 녹색 채권 주요 발행자 순위”, 2021년 1월

11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Climate Bonds Initiative), “일본: 2020년 녹색금융 현황”, 2021년 3월

12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Climate Bonds Initiative), “2021년 북미 시장 현황”, 2021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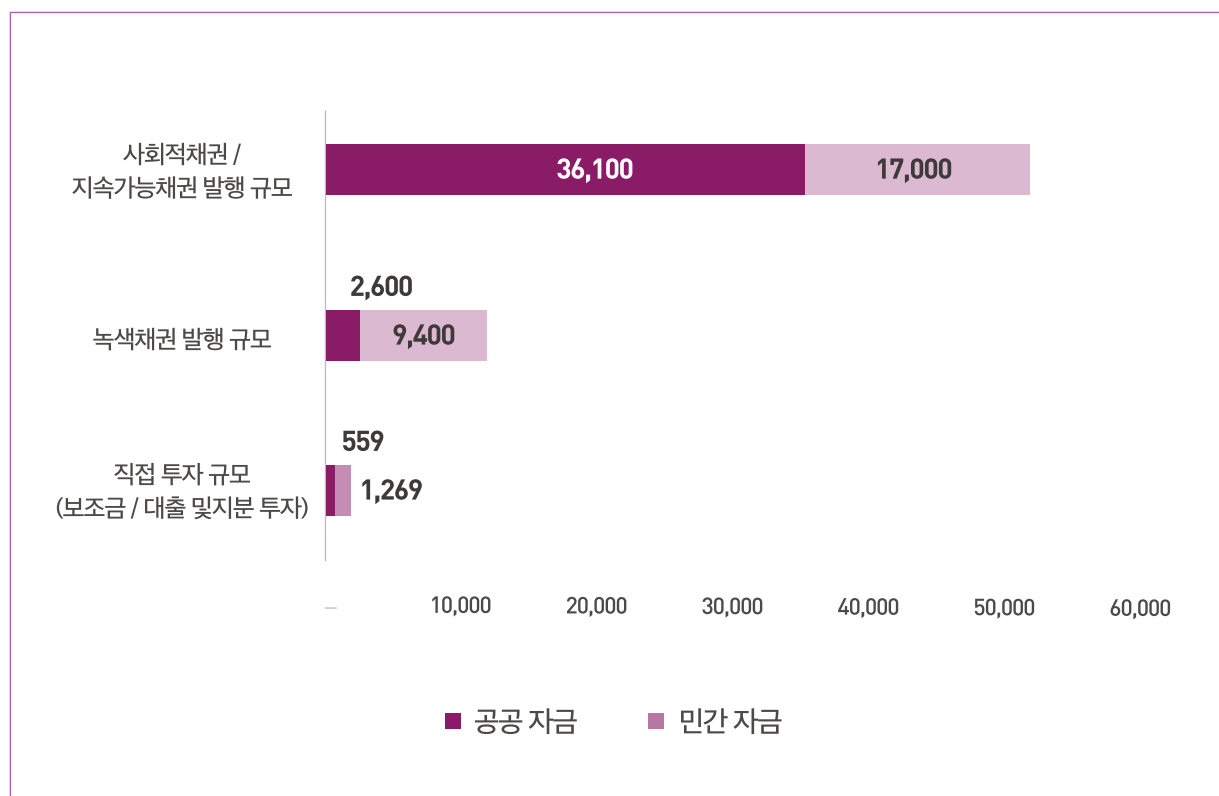
13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Climate Bonds Initiative), “아세안 지속가능 금융: 2020년 시장 현황”, 2021년 4월

동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으로 영속하게 된다(정부 보증 대출을 받은 국내기업의 평균 기업 연령은 11년이며 정부 보증 대출의 절반 이상은 우량기업에 제공되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정책 또한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으로 남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이다.

위 OECD 연구의 가장 큰 교훈은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 공공주택, 녹색채권 등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으로 인해 국내 지속가능금융 생태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 및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금 지원 대상을 우선순위화하고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자금 지원의 활용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과 교훈을 통해,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다 견고하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2] 국내 지속가능금융 생태계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 참여 현황 (2021년)

(단위 : 1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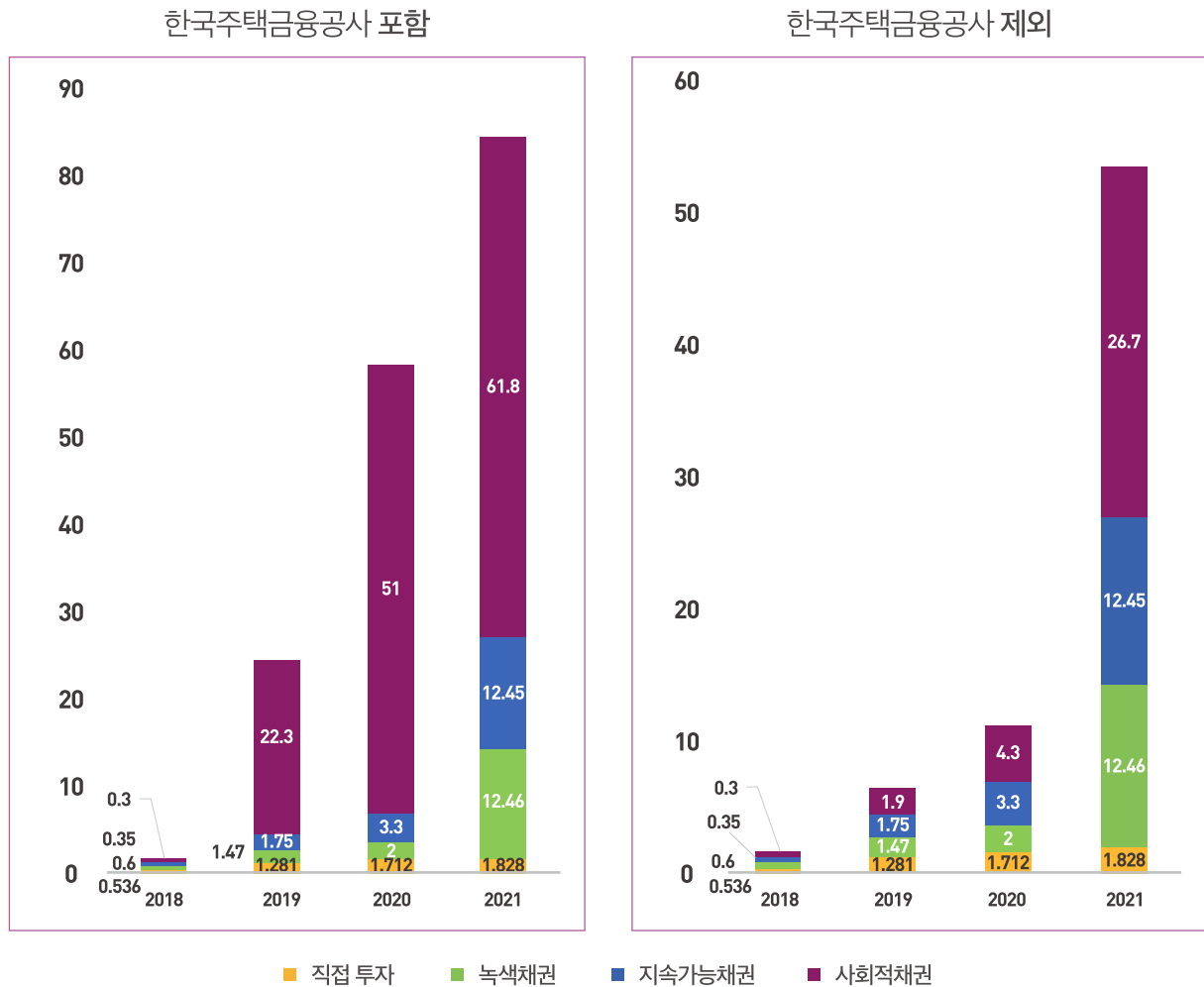
* 출처: 금융위원회¹⁴, 한국신용평가¹⁵

¹⁴ 2021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의 공식 언론 보도자료에서 가져온 공공 및 민간 직접투자 관련 데이터 (링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821>)

¹⁵ 2021년 9월 30일 기후변화센터에서 주최한 제2회 지니포럼 중 "한국의지속가능한 녹색 금융 투자의 국내 동향"에 대한 한국신용평가 강연에서 공유된 채권 발행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관련 데이터 (링크: <http://www.climatechangecenter.kr/boards/reference/view?&page=1&id=1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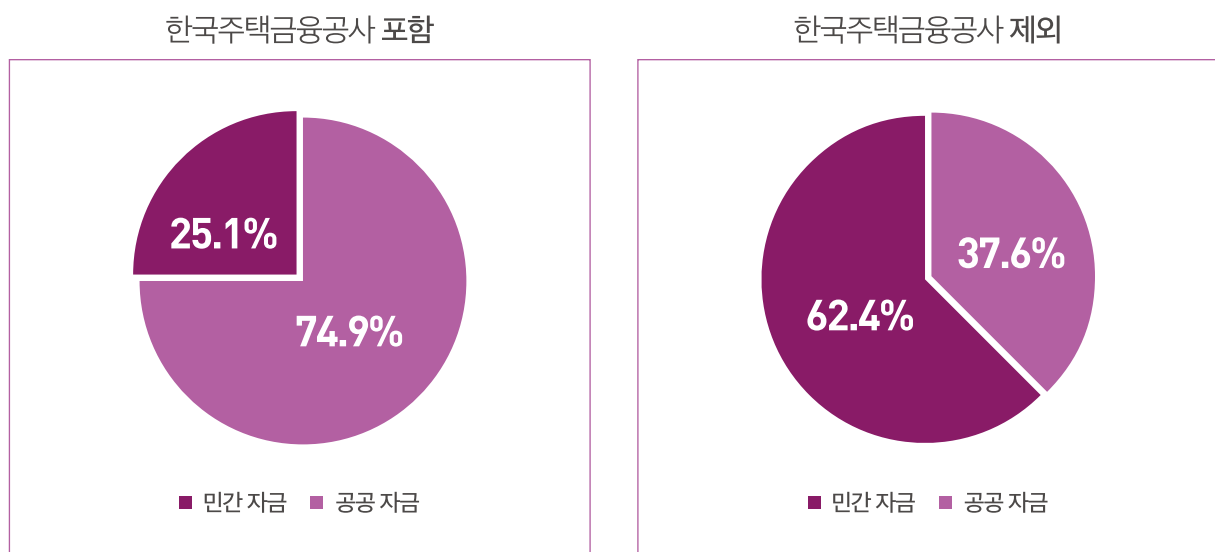
[그림 3] 국내 지속가능금융 진화 과정 (2018~2021년 ¹⁶⁾¹⁷⁾

(단위 : 조 원)



[그림 4] 국내 SRI 채권시장에서 기발행채권 중 공채 · 사채 비중

(2021년 12월 31일 기준)



¹⁶ 2021년 '직접투자' 데이터는 10월 말까지의 데이터만 포함

¹⁷ 출처: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 사회적채권 :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지속가능채권 :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2) 투자자 기반 다각화

2.1. **임팩트 VC와 액셀러레이터 부족.** MYSC에 따르면 국내 171개 VC 중 임팩트 투자를 전담하는 VC는 3개(엘로우독, D3주빌리파트너스, HGO이니셔티브)에 불과하며, 국내 322개 액셀러레이터 중 임팩트 투자를 전담하는 액셀러레이터는 5개(소풍벤처스, 임팩트스퀘어, MYSC, 크립톤, 한국사회투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참여자가 적다는 것은 임팩트 전용 VC와 액셀러레이터를 넘어 임팩트 투자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2.2. **최근 임팩트 투자자의 증가 추세.** 최근에는 VC와 액셀러레이터 외에도 임팩트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공유가치창출(CSV), 직접 지분투자, LP(유한책임투자) 등을 통해 임팩트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SK그룹은 사회적 벤처에 약 1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임팩트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비영리재단과 비정부기구 또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임팩트 투자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굿네이버즈는 투자 점담 기구인 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를 설립했다.

2.3.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의 지속가능금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 인센티브 부족.** 미국, 유럽연합 등의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같은 정책 인센티브가 사실상 전무하며, 공익을 위해 사회적 투자를 하는 비영리재단에 관한 규칙과 규정 또한 모호한 실정이다.

3)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유동성 및 투자 회수

3.1. **제한적인 사모펀드(벤처) 투자 회수 전략.** 현재 국내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투자 회수 전략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수반하는 M&A 및 IPO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금융에 참여하는 데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향후 몇 년 안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임팩트 투자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몇 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이 있다. 먼저 (1) ESG 세컨드리 펀드(Secondary Fund) 설립 등을 통해 추가 펀딩 라운드에 인수 및 투자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신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2) 2차 시장을 구축하거나 사회적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부분 투자 회수가 가능하도록 이익배분제와 같은 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

3.2. **기업 IPO에 앞서 ESG 컴플라이언스 대비 부족.** 대부분의 ESG 컴플라이언스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ESG가 의무화되기 전에 상장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상장 이후 ESG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는 데 난관을 겪고 있다.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ESG와 지속가능경영 컴플라이언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이다.

V. 정책권고

1.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전략 계획 수립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간 노력과 민간 협력이 일관된 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의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전략 계획을 담당할 중앙 조정기구(‘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향후 관련 정책 및 규정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차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전략 계획은 자산소유자,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전통적인 시장 참여자 뿐만 아니라 기금, 재단, 학계 등 지속가능금융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진입자를 고려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환경 관련 지침을 개발하는 데에만 집중했다.¹⁸ 하지만, 향후 전략 계획 수립에 있어 유사한 목적을 다룬 EU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자금 조달 전략(EU Strategy for Financing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nomy)을 참고할 수 있다.

2. 지속가능금융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점검 실시

2021년 기준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금융 자금지원 규모는 39.3조원이었다. 지속가능금융 생태계에서 공적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할 때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는 등 왜곡 현상을 포함한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정책 효과가 제대로 된 평가 및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된다.

¹⁸ 한국 정부의 초점은 2020년 12월 수립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다. ‘녹색금융’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한 부문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합동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운영
- 환경부 주도 하에 녹색경제활동과 친환경 기업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이 전략에 할당된 예산은 11조 7천억 원이 넘는다.

3. ESG 투자 관련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와 정부 전략 (지속가능발전 의제) 간의 일관성 유지

정부의 ESG 및 지속가능금융 전략(위 1번 정책권고)은 그린뉴딜 등 정부의 여타 계획과 일관되어야 하며 재정 및 기타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정부 전략은 저탄소 경제(203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를 촉진하고 포용적 성장(예: 서울 외 지역 개발 투자) 하는 방향성을 독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금융에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하도록 투자자 기반 다각화,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임팩트 투자사를 위한 인센티브(세금 면제)를 도입하고 투자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는 노력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 활동 현황 요약 : 정부는 친환경 기업 대상 세제혜택¹⁹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발표된 계획이(혹은 기타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에 대한 혜택 포함)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4.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구축 주도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를 통해 향후 정책 과정에서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개념 및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EU 회원국들이 지속가능금융을 규제할 때 적용해야 하는 EU 분류체계 규정 (Taxonomy Regulations)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에 포함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정의 혹은 ‘사회적’ 정의를 기반으로 구축된 별도의 분류체계이다. 현재 분류체계는 녹색투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주목 받고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2022년 2월 공개된 EU 자문관들의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 최종안을 통해 이러한 트렌드의 모범 사례가 제시되었다. 한국도 세계 표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균형 잡힌 한국형 사회적 분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활동 현황 요약 : 최근 환경부는 친환경 활동 및 기업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한국형 분류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녹색경제활동 적합성 기준에 따라 친환경 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배제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 인센티브 혹은 규정을 수립할 때 정부가 사용할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¹⁹ 뉴스1 (2020년 12월 7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035152>

5. 컴플라이언스 및 공시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개선

5.1. 자발적 공시 vs 의무 공시. 싱가포르의 지속가능경영 공시 제도와 유사한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접근법에서 출발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무 공시 제도(예: 유럽)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싱가포르가 채택한 접근법과 유사하게 주요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가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⁰. 규제치짐은 국가의 지속가능금융 의제 우선순위(예: 위 1번 정책권고에 기술된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전략 계획)와 맥을 같이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다단계적(Multi-phased) ESG 공시 의무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²¹.

ESG 공시 의무는 기업부담을 가중시켰다. 국내 상장사 중 88.6%는 ESG 공시 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ESG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침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ESG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공시 항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각 지표 평가 방법을 안내한다.

5.2 공시 기준.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은 한국의 맥락에 적합한 일련의 공통된 ESG 공시 지표를 제시하여 ESG 공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²². 특히 ESG를 처음 접하거나 잘 모르는 기업에게는 매우 유용한 지침서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된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등 외부 ESG 평가 ‘대응법’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그린뉴딜과 같은 국가의제나 전반적인 기업 경제활동에 ESG를 통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²³. 나아가 MSCI 혹은 DJSI처럼 공시된 정보의 실제 사용자인 투자자 중심으로 개발된 지표와 달리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은 정부 주도 하에 수립되고 한국의 맥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 국제 신뢰를 확보할 수 없으면, 결국 한국 기업들은 국제표준에 따른 ESG 공시와 별도로 한국형 ESG 지표에 따른 공시를 이중적으로 해야 하는 부담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²⁴.

20 싱가포르의 2023년부터 금융, 에너지, 농업, 식품 및 임산물 산업에 기후공시를 의무화한 후 2024년에는 이를 건축 및 운송 부문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출처: 싱가포르 거래소 (<https://www.sgx.com/media-centre/20211215-sgx-mandates-climate-and-board-diversity-disclosures>)

21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2021년 1월 14일), <https://www.fsc.go.kr/no010101/75176>

22 예를 들어 글로벌 ESG 지표는 조직 ‘다양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성’ 지표가 완화되었다.

23 ESG경제, “K-ESG 가이드라인,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2021년 12월 5일
(링크: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5>)

24 데일리임팩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한국형 ESG...현장은 ‘쓴웃음’”, 2021년 12월 3일 (링크: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7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기업 전략에 지속가능경영을 통합시키고 지속가능경영이란 단순히 공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GRI, TCFD, SASB 등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표준과의 관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해외 투자자들 사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의 공시 업무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130개 한국 기업이 이미 GRI, TCFD, SASB와 같은 국제표준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제표준을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2년에 지속가능경영 공시에 대한 국제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²⁵. 이 또한 개정안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활동 현황 요약: 공시와 관련된 분절된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복잡성이 높아지고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거래소를 감독하는 등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ESG와 SRI 지수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책임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²⁶. 그러나 부처별로 제각각 ESG 공시 기준을 제시하고자 경쟁에 뛰어들어 ESG와 지속가능금융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한국형 ESG 지표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산업계와 투자자들 사이 널리 적용될 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5.3 중소기업에 위한 포괄적인 정책. ESG를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는 중소기업들에게 ESG 중심의 투자 기회와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적용한 기업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ESG 이행은 대부분의 중소기업한테는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위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ESG 컴플라이언스 및 공시 부담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²⁷

한국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공시에 대한 기업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워크숍을 제공할 수 있다. 2017년 싱가포르가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공시를 의무화했을 때 싱가포르 거래소는 지속가능경영 공시 워크숍을 제공했다²⁸.

정부 활동 현황 요약: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2021년 8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ESG 공시와 ESG 경영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며²⁹, 2021년 11월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및 공시지원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위원회를 설치했다³⁰.

25 금융위원회, "지속가능경영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SASB 기준 한국어 번역본 제공", <https://www.fsc.go.kr/eng/pr010101/76850?srchCtgy=2&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26 아시아재단 (2020년 9월),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조사"

27 현재 지속가능경영 공시 정책 및 규정은 규모가 큰 상장기업에만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큰 만큼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과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과 행정 업무 증가가 지속가능경영 공시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SG 경영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2021년 6월 14일), https://www.fomek.or.kr/main/bbs/board_view.php?pk_seq=573&sc_bo_table=now&page=1 &)

28 싱가포르 거래소, "SGX 지원 지속가능경영 공시 워크숍 제공", https://links.sgx.com/1.0.0/corporate-announcements/HXBM6ZMF6C7P1GA2/20170207_SGX_offers_companies_subsidised_sustainability_reporting_workshops.pdf

29 연합뉴스 (2021년 8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6018600002>

30 뉴시스 (2021년 11월 23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848775>

6.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의 유동성 확보 및 투자회수 촉진

자본시장에서 ESG 전문 펀드의 규모는 약 7조 원으로 지난 3년간 3배 이상 성장 중이지만, 여전히 코스닥 (KOSDAQ) 시장에서 ESG 유니콘으로 IPO된 사례는 드물다. 특히, ESG 벤처들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전 단계인 코넥스 (KONEX)의 활성화 및 세컨더리 펀드 (Secondary Fund) 등을 통한 ESG 기업들의 유동성 및 투자 회수 촉진 정책이 시급하다.

한편, 투자회수 과정에서 ESG와 지속가능성을 통합하기 위해 IPO 신청 기업의 주요 ESG 항목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다. 즉, 기업공개 전에 ESG와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준수하고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ESG와 지속가능경영 정보 공시 의무에 대한 홍콩 증권거래소의 상장 지침서를 참고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없었지만, 민간기업들 중 SK에코플랜트처럼 IPO 경쟁사들 사이 기업 차별화 전략으로 ESG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사례들이 있었다³¹.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7. ESG에 대한 인식 제고

ESG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위에서 논의된 전략계획, 분류체계 수립과 함께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대중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는 기업 재무정보 및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EU 유럽 단일접속지점 (European Single Access Point)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활동 현황 요약 : 한국 정부는 2021년 12월 20일 첫 “ESG 정보 플랫폼 (한국거래소)” (<http://esgportal.kr>)를 출범시켰다³². 금융위원회 주도 하에 개발된 이 플랫폼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ESG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이 플랫폼은 ESG 정보를 공시하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제공한 기업의 ESG 점수(다양한 ESG 지표 기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³¹ 한국경제 (2021년 6월 6일),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6045168i>

³² SBS Biz (2021년 12월 19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268386>

8.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내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한국은행은 국내 은행 및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와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은 녹색채권 등 지속가능한 투자상품에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위해 1년 만기 무이자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ESG와 지속가능금융 생태계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첫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표함을 통해 국내 ESG와 지속가능금융에 앞장서고 ESG 공시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하고, 정부와 시장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을 금융기관과 산업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좋은 예시를 공유하고, 정부가 기업에 기대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2021년에 통화감독청의 기후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전략을 제시하는 첫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표했고³³, 홍콩 금융관리국 연례보고서에는 금융관리국의 로드맵을 보여주기 위해 녹색금융과 지속가능금융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³⁴.

정부 활동 현황 요약: 한국은행 또한 ESG 연계 자산이 투자 우선순위라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2021년 9월 한국은행은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을 중심으로 해외자산 투자에 포괄적인 ESG 평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ESG 연계 자산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 ESG 연계 지분투자는 1억 4천만 달러 증가하고 ESG 연계 채권투자는 15.2억 달러 증가했다³⁵.

33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2020~2021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https://www.mas.gov.sg/publications/sustainability-report/2021/sustainability-report>

34 홍콩 금융관리국(HKMA), “2020 연례 보고서”,
https://www.hkma.gov.hk/media/eng/publication-and-research/annual-report/2020/AR2020_E.pdf

35 서울파이낸스 (2021년 9월 28일),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118>

정책 권고안 정리 요약

	권고 사항	EU, 싱가포르, 일본, 홍콩, 미국 등의 참고사례
의제 설정 (‘신호 제공’) 및 자금지원	1.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호 제공’),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전략 계획 수립 2. 지속가능금융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점검 실시 3. ESG 투자 관련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와 정부 전략 (지속가능발전 의제) 간의 일관성 유지	유럽연합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자금 조달 전략 (EU Strategy for Financing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nomy), 싱가포르 녹색 행동계획 (Green Action Plan) EU 녹색분류체계 위임법률에 따른 영향 평가(2021년)³⁶ 지속가능금융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미국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예 : 청정에너지기술 투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IRC §48C)
가이드 라인	4.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구축 주도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EU 비재무정 보 공시 가이드라인 (2019년) EU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분류체계 유럽 중앙은행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 가이드 라인 (2017년)
규제	5. 컴플라이언스 및 공시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개선 6.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의 유동성 및 투자회수 촉진	EU : 기업 지속가능경영 공시 지침(SCRD), 2021년 말 신의성실 의무, 투자 및 보험 자문에 관한 위임법률에 대한 EU 규정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의 금융기관 기후공시 가이드라인(2021년) 홍콩 : ESG와 지속가능경영 정보 공시 의무에 대한 홍콩 증권거래소의 상장 지침서

³⁶ 영향 평가를 통해 EU 환경 목표 달성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제시하여 투자활동을 지원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정책 및 규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대부분 구상 단계에서 EU 집행위원회 경제전문가 그룹이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권고 사항	EU, 싱가포르, 일본, 홍콩, 미국 등의 참고사례
촉진, 조율, 플랫폼 구축	2020년 8월 한국 금융위원회는 공식 민간 협의체(T/F)의 구성을 추진. 협의체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관련 정부 부처, 민간은행 등 주요 금융시장 이해관계자로 구성됨. 본래 이 협의체는 '녹색금융'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지속가능금융과 ESG를 모두 아우르도록 범위 확장.³⁷	EU : 유럽 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자금 지원 행동 계획'(2020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싱가포르 : 기후변화와 ESG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협의체
정보 제공	7. ESG에 대한 인식 제고	EU : 기업 재무정보 및 비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유럽 단일접속지점(ESAP)의 '원스톱샵(진행중)' (2021년) EU : EU 순환경제 재정지원 플랫폼 (2020년) 미국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행물, 미국 금융 시스템 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보고서
제도 구축	8. 지속가능금융 생태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일본 : 녹색채권 등 지속가능한 투자상품에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위한 1년 만기 무이자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일본은행의 새로운 기후변화 프로그램

³⁷ 2021년 12월 8일 4차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았다.

1) 금융시장의 기후리스크 관리 · 감독 2) 금융시장을 위한 '녹색금융 지침서' 개발 3) ESG 공시 및 평가 시스템의 현황과 향후 계획
4) 한국 ESG 트렌드에 맞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Annex 1 : 한국형 ESG

2021년 12월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하에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구축하여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GRI 등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3,000여개 이상의 지표를 분석했다. 2021년 5차례 실무그룹 세션을 기획하여 산업계, 투자자, 연구기관, 신용평가사, 언론사 등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반영했다.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1~2년 주기로 발간하고 업종별, 기업 규모별 가이드라인도 2022년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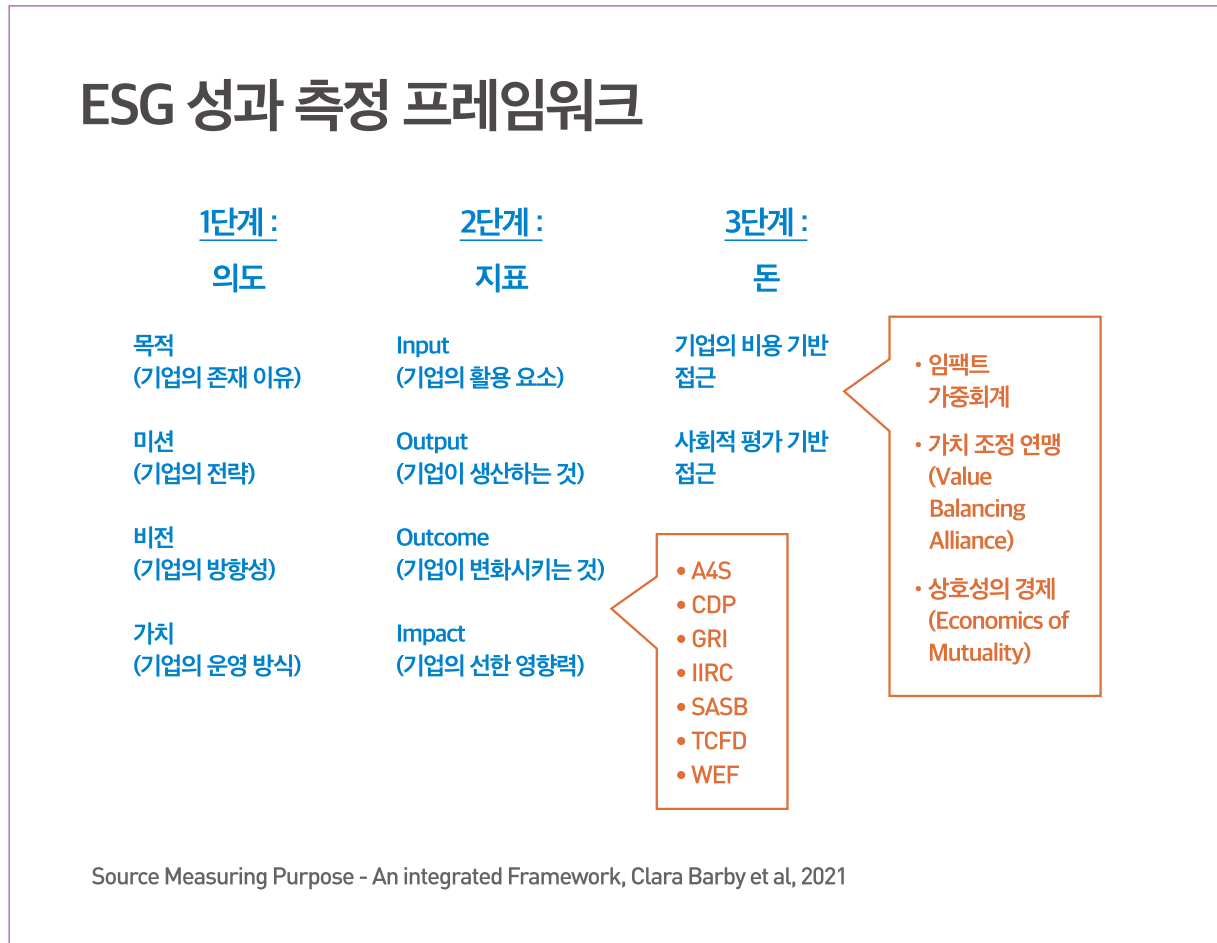
권고 사항	주요 평가 항목		
정보 공시 (5개 문항)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ESG 핵심 이슈 및 KPI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Scope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 · 규제 위반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사회 (22개 문항)	목표 수립 및 공시	신규 채용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직원 훈련 비용	교육훈련비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 (평균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 참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 · 규제 위반		
지배구조 (17개 문항)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회 개최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내부 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		내부 감사부서 설치

4개 영역, 27개 범주, 총 61개 기본 진단항목

Annex 2 : 임팩트 가중 회계

글로벌 임팩트금융 추진기구인 GSG(Glob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의 국가자문위원회 의장 문철우 교수가 IFB 서울 실무 정책 그룹에 공유한 개념이다. 문철우 교수는 ESG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와 진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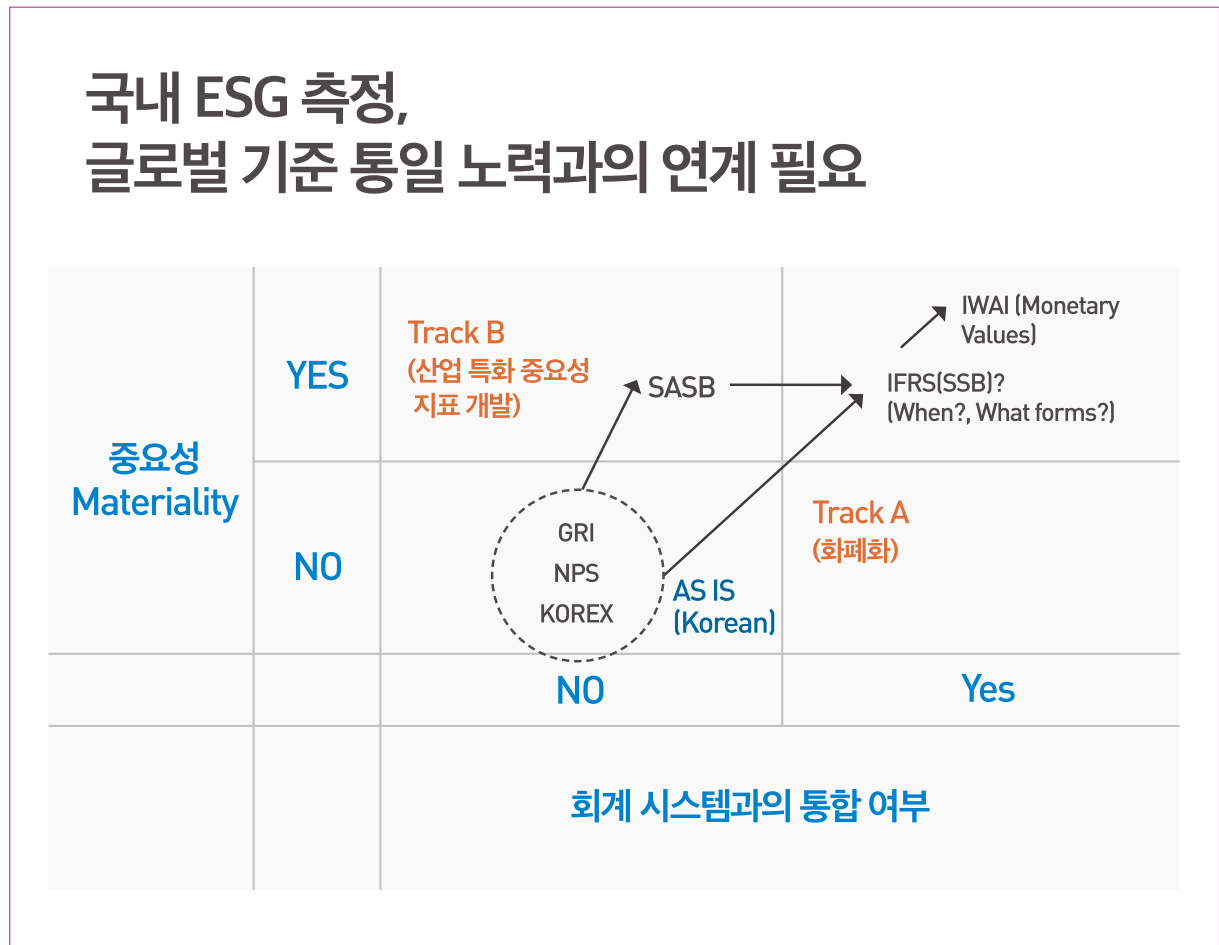


문철우 교수는 하버드경영대학원, 옥스퍼드 사이드경영대학원 등 학술기관이 참여한 “임팩트 가중 회계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임팩트 가중 계정(IWA)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항목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에 임직원, 소비자, 환경, 전반적인 사회에 기업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가 금전적인 이익과 손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보고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통합된 기업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³⁸ A4S는 인간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성회계 프로젝트(Accounting for Sustainability Project)를 뜻한다. CDP는 환경 요소 측정 및 회계에 초점을 맞추었던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이다. GRI는 글로벌 공시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뜻한다. IIRC는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 Reporting Council)를 뜻한다. SASB는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뜻한다. TCFD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T/F(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포럼(WEF)도 지속가능성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문철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중대성과 회계 제도 통합 유무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다양한 측정 기준들이 한국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요약했다.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본주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필요 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명확한 지표와 투명성이 없으면 투자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금처럼 재무적 요소만 보고 투자 결정이 내려지고, 기업이 임직원, 소비자,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등한시되어 총체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 창출 활동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문철우 교수는 항공사와 포장 제품 기업 사례를 제시하면서 환경, 제품, 고용이라는 3가지 축을 토대로 임팩트 가중 회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었다.

Annex 3 : 일본 ESG 사례연구

2021년 10월 27일 카말라 KC (에스앤엘파트너스 법률 사무보조)는 IFB 실무 정책 그룹과 일본의 ESG 사례 연구를 공유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SG 재정지원 촉진을 위한 최근 일본 정책 동향

날짜	정책
2020년 9월	일본 경제산업성, 2020 기후혁신금융전략 발표
2021년 4월	일본 중앙정부, 2015년 7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6% 감축한다는 목표를 46%로 높이겠다고 발표
2021년 5월	일본 경제산업성, 2050년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전환금융 지침서인 '기후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일본 TFG) 수립. ³⁹
2021년 6월	일본 환경성,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개정
2021년 7월	일본은행, 대형은행의 ESG 공시를 강화하고 기업 운영에 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위한 1년 만기 무이자 대출상품을 도입한다는 새로운 기후전략 발표
2021년 10월	일본 금융청, 사회 사회적 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은 일본 맥락에서 국제자본시장협회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됨.

³⁹ Clifford Change, "Insights into ESG in Japan", February 2022,

<https://www.cliffordchance.com/content/dam/cliffordchance/briefings/2022/02/insights-into-esg-in-japan.pdf>

2. 일본 ESG 공시 규정

일본 기업의 정보 공시와 관련된 주요 법적근거는 금융상품거래법과 회사법이다.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특정 기업 및 기관은 투자자를 위한 정보 공시 설명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되어 있다. 회사법은 주주와 채권자를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와 사업성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도쿄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기업은 각 증권거래소 상장 기준에 따라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산업성의 ESG 공시 가이드라인과 같은 상장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ESG 공시 의무가 법제화(“경성규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

3. ESG와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일본 민간 파트너십

2021년 10월 기준, 일본 기업이 TCFD 지지 선언을 가장 많이 했음이 확인되었으며, 실제 2021년 2월 8일 기준 341개 기업과 317개 기관이 TCFD 지지선언을 했다. 이렇게 일본이 보인 성과의 배경에는 2019년 5월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구성된 TCFD 일본 컨소시엄이 있다. 이 컨소시엄은 기후 관련 재무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금융기관, 산업계 협력을 추진하며,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 환경성, 금융청 모두 이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TCFD 일본 컨소시엄은 ‘녹색투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2019년 10월 TCFD 정상회의에서 발표했다. 본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정보, TCFD 권고사항에 따른 공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TCFD 일본 컨소시엄의 성과를 기반으로 자발적 공시에서 의무 공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에서 ‘프라임’ 시장으로 분류되는 상장사는 앞으로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 규범에 따라 TCFD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기후 관련 리스크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청은 2023년부터 상장사의 기후 관련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 지배구조 기준은 ‘연성규범’이기 때문에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접근법이 채택될 예정이지만, 금융청에서 공시를 의무화하면 공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된다.

민간 협력의 또 다른 성공적인 사례는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ODA 사업이다. 일본 기업들은 국제협력기구에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되면 사업을 확장하고 개발도상국에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선정 기업은 1년 내에 파트너 국가의 현지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신기술, 제품, 노하우 등을 동원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모색하며, ODA 사업의 실행가능성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한 검토한다. 이러한 일본 ODA 프로그램은 일본 정부, 일본 기업, 개발도상국 간 윈-윈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참고문헌

Climate Bonds Initiative (2021). ASEAN Sustainable Finance : *State of the Market 2020*. 링크 : <https://www.climatebonds.net/files/reports/asean-sotm-2020.pdf>

Climate Bonds Initiative (2021). Japan : *Green Finance State of the Market 2020*. 링크 : https://www.climatebonds.net/files/files/CBI_JPN_SotM_20_02D.pdf

Climate Bonds Initiative (2021). *North America State of the Market 2021*. 링크 : https://www.climatebonds.net/files/reports/north_america_sotm_final.pdf

Forbes (2019). *Millennials Will Become Richest Generation In American History As Baby Boomers Transfer Over Their Wealth*. 링크 : <https://www.forbes.com/sites/jackkelly/2019/10/26/millennials-will-become-richest-generation-in-american-history-as-baby-boomers-transfer-over-their-wealth/?sh=61b58f456c4b>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2020).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링크 : <http://www.gsi-alliance.org/trends-report-2020/>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4). *Promoting the Financing of SMEs and Start-ups in Korea*. 링크 :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promoting-the-financing-of-smes-and-start-ups-in-korea_5jxx054bdlvh-en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2021). *Ranking of Main Issuers of Green Bonds in France in 2018*. 링크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140227/ranking-leading-french-issuers-green-bonds/>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Investing in the SDGs - An Action Plan*. 링크 :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wir2014_en.pdf

금융위원회(2021년) '녹색금융을 위한 주요 정책' 링크 :

<https://www.fsc.go.kr/eng/po060101#:~:text=In%20order%20to%20facilitate%20their,corporate%20management%20on%20ESG%20factors.&text=Then%2C%20from%202026%20to%202029,report%20their%20ESG%20management%20status.>

아시아재단(2020년) '한국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2021년) '500대 기업 ESG 준비실태 및 인식조사' 링크 :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View.aspx?content_id=c81a2359-590f-4448-ba7e-d57bca9d70b2&cPage=&search_type=0&search_keyword=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21년) 'ESG 관련 중견기업 조사' 링크 :

https://www.fomek.or.kr/main/bbs/board_view.php

한국상공회의소(2021년)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 분석 결과보고서' 링크 :

<http://www.korcham.net/FileWebKorcham/Esg/ESG%20%ED%99%95%EC%82%B0%20%EB%B0%8F%20%EC%A0%95%EC%B0%A9%EC%9D%84%20%EC%9C%84%ED%95%9C%20%EA%B8%B0%EC%97%85%20%EC%84%A4%EB%AC%B8%EC%A1%B0%EC%82%AC%20%EB%B6%84%EC%84%9D%20%EA%B2%B0%EA%B3%BC%EB%B3%B4%EA%B3%A0%EC%84%9C.pdf>

한국신용평가(2021년) '지속가능한 녹색 금융 투자의 국내 동향' 링크 :

<http://www.climatechangecenter.kr/boards/reference/view?&page=1&id=1693>

